

2차 기록관리혁신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 일 시 : 2018. 3. 30.(금) 14:00-16:00
- 장 소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 참석자 : 총 10명
 - 자문위원 : 손동유, 전진한, 박종연, 왕영훈, 전해영, 이정연
 - 국가기록원 : 이소연(원장), 박지태, 김정숙, 정상희
- 주요 자문사항
 - 자문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
 -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 세부과제(1-2, 1-3) 토의
 - 기록관리혁신 자문위원회의 공식 질의

<주요 내용>

□ 자문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

- 대외협력팀과 협조
 - 자문회의 운영관련 연락 및 자료요구는 대외협력팀으로 일원화
- 회의록 작성·공개
 - 회의록의 상세작성 및 혁신추진단 게시판을 통한 공개
 - 회의자료는 상황에 따라 공개여부 판단
 - 회의록 작성시 참석자 공개, 발언자 성명 비공개 및 내용 공개

□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 세부과제 보고 및 토의

가. 주요 보고사항

- 기록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 보고(1-2 과제)
-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 보고(1-3 과제)

나. 주요 토의사항

- 7종 보존체계 유연화의 의미는? 보존기간 7종은 전자기록체계에서는 달라져야 할 것임. 전자기록은 영구기록과 한시기록으로 구분해서 기(록)관 자체역량에 맡기고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강화해서 일선 전문요원의 부담 경감 필요
- ⇒ 현재 7종의 보존기간은 경직된 구조라는 것임. 또한 개별법령에서 정한 상이한 보존기간의 존재를 현 체계로 수용하기 곤란, 다양한 보존체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오픈 필요. 다만, 전면 오픈할 것인지, 한시와 장기로 구분할 것인지 의견 필요
- ⇒ 생산단위에서 기록은 업무증거 가치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정하고, 기록관리 단계에서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기록에 대해 합리적인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있는지 고려 필요
- 세부과제가 재설정되어 6-2에 있던 기록분류체계 재설계, 평가 도구 연계가 1-2로 통합되었는가? 추진일정에 분류체계 재설계에 관한 사항이 없고 21년도 추진일정에서도 BRM과 분류체계가 별도로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 ⇒ 통합되고 생산현황통보가 세부과제로 분리되었음
- ⇒ 내용과 일정은 검토 중이며, BRM이 선결되지 않으면 과제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집중과 선택을 한 것이며, 분류체계와 BRM 일정은 반영하겠음
- 평가정책뿐 아니라 전자기록관리체계 같은 추진과제 추진 시 기존의 시스템을 일부 보완 개편할지, 아예 재설계해야 될지 혁신TF 일정은 6월말까지인데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함
- ⇒ 추진단이 각 과제의 진행상황이나 과제 중에 제기되는 안 가운데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음

- 쟁점사항(기록관리기준표 재설계 및 적용방법)의 공론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공론화 일정은? 결론을 정하고 논의하면 들러리라는 비판이 우려됨
- ⇒ 국가기록원의 고민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해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전체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6개기관 유형별로 접점을 찾는 방법일 수도 있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그 중에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도출 할 것임
- ⇒ 기록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선정하고, 동의하는 분들은 동의하는 대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설득이 필요
- ⇒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6월까지 (이행)방안을 정리해야 하는데 과정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하반기에는 공론화를 추진하려고 함
- ⇒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며, 논의 시작부터 알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시행령에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생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지금도 타당성이 있는지, 실제로 기관에서 조사연구검토서와 시청각기록이 중요한 기록인지?
- ⇒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기록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음
- 기관장 보고 자료와 같은 것들,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기록을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 ⇒ 김삼화 의원 법령개정안과 관련, 조사연구검토서 등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려 함
- 행정정보데이터세트에 대한 생산 파악 및 관리 방안은 검토되는가? 과제에 검토사항으로는?
- ⇒ 전자기록관리과에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중심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연구 중임. 내부 정보공유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음

- ⇒ 생산현황통보는 기관의 행정행위와 관련된 기록정보의 포착이 목적이므로 향후 고려대상으로 검토 중임
- 데이터세트의 경우 다른 법령에 데이터담당관이란 제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데 데이터를 다루는 유사기관의 법령, 제도, 인력 배치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 ⇒ 본부 전자정부국과도 논의 중임, 또한 시스템 폐기 시 데이터의 처리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후속관리는 국가기록원이나 통계청에 맡기는 안이 검토됨, 어떠한 제안이든 주시면 반영하겠음
- 자료에는 BRM관리 권한을 국가기록원이나 기록관 단위에서 가지고 오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 ⇒ 검토 중인 안의 하나임. 2015년부터 BRM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또한 대안으로 BRM체계 유지 및 기록관리 관련 항목 조정이나, BRM을 사용하되 기록관리시스템을 거쳐 BRM에 기록관련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방법 등 가능한 많은 대안 검토 중임
- BRM 운용은 일선 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문제이며 생산현황통보에 대해 무용론을 가지고 있음. 생산현황통보 유형을 단순화하고 통합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면적으로 개편할 생각은?
- ⇒ 기관 입장은 이해하나 무용론 수용은 곤란. 생산현황은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기 위한 업무가 문제이며, 기관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임
- ⇒ 문제는 취합된 데이터의 활용방안이 없이 축적만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이 문제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 전자적 방식의 통보를 통해 오류발생률 감소, 기관 필요데이터 중심의 생산현황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임
- BRM은 기록관리기준표와 관련하여 운영상 관리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BRM자체가 단위과제 중심의 기록관리로 실제 획득하지 못하는 기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 관리권한을 국가기록원이 가져와도 획득되지 못한 기록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지, 평가도구가 제대로 개선 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기록의 생산 이전부터 적용 가능한 틀을 정밀하게 제시하여 누락되는 기록이 없이 모두 포착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 것임. 단시간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기록원이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기관의 상황, 기록연구사의 상황, 그 분들의 관심도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기에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음

○ 평가도구 개선방안에서 관리권한 관계를 협의하는 1안과 종속적인 BRM에서 벗어난 자체적인 기록관리 기준 제시를 하는 2안을 다 같이 검토한다면 일정에 무리는 없는지?

⇒ 2안으로 할 경우 BRM은 조직관리용으로만 제한하고 별도의 분류체계구축을 해야 하므로 기록조사부터 다시 해야 함.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BRM으로부터 승계 받는 조직 정보와 업무상 형성되는 기록과 연계되는 별도의 GRS, RS 등의 구축과 시스템 구현등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과제와 관계도 검토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 법령상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어야 권한위임을 진행 할 수 있는데, 미설치 상태인 지자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이해됨. 사안별로 기능을 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령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관리를 위한 정책기능이 없는데 정책기능이 주어진다면

기록관리기준표는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기능이라 생각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외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 권한이 별로 없음, 향토자료 수집정도 말고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전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기타 공공기관에 들지 않는 출연기관의 경우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록 생산기관인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소관 기관으로 정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됨

⇒ 서울시와 경남이 입장차이가 있는데 경남은 시군으로부터 기록을 이관 받는다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음

○ 서울시의 한 자치구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또 다른 자치구는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면 서울시 기록이 양쪽으로 나뉘어야 하는지?

⇒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자치구 기록은 서울기록원에 이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야 함. 다만 17개 광역지자체의 입장이 달라 협의와 조율의 어려움이 예상됨

○ 1-1 세부과제 ‘공공기록물 개념 및 관리대상 정비’는 진행 중인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지?

⇒ 혁신추진단 법제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현재로서는 자료 공유가 조금 어렵고 진행이 좀 더 되면 보내드리겠음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의 3대 과제가 국가기록원 혁신, 공공기록관리 혁신,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이고, 지금 추진단은 공공기록관리혁신팀과 대통령기록관리혁신팀이 있는데 국가기록원 혁신은 추진단 총괄팀에서 하는지?

⇒ 총괄팀 내의 조직개편팀에서 하고 있음. 공공기록관리체계 혁신수행에 적합한 기록원 조직과 프로세스 개선을 조직구조로 풀어내야함.

○ 조직개편팀에서 작성한 안을 자문위원회가 받을 수 있는지?

⇒ 받을 수 있음

□ 기록관리혁신 자문위원회의 공개 질의

○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민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원장의 비전과 계획은? 국가 기록원의 혁신과 개혁을 생각해 볼 때 방향에 대한 공감감이 있어야 하므로 비전과 계획을 듣고 싶음

⇒ 비전과 방향에 대해 말하는 것은 1박 2일로 이야기해도 부족하므로 지금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내용부터 하고 싶음

○ 국가기록관리혁신 TF 1분과 과제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백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추진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어떤 방법과 예산으로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외부의 궁금증이 해소될 듯함

⇒ 백서 발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히 내부 인력이 할 것이므로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하지는 않을 것임. 방법은 내부인력 중에서 집필을 맡아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임. 현재 과제는 집필진을 확정하는 것이며 현 단계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고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음

○ 백서는 국가기록원을 봐왔던 사람들과 내부 사람들이 융화되어 쓸 때 의미가 있다고 봄. 예를 들어 환경부도 4대강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을 직접 만나 구술 채록하는 방법까지 거기 TF에서 이야기가 나왔음. 일방적으로 국가기록원 내부의 시선으로 백서를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외부적으로 확장해서 어떤 일정대로 완성해 내겠다는 원장님의 정확한 워딩(wording)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 내부에서 급히 작성해서 1분과 보고서에 대항하는 내러티브가 나올까 걱정하시는 것 같음. 이 시점에서 성찰에 대한 기록화와 정리를 또 다시 외부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함. 혁신TF가 외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1분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걸 받은 후속작업이 또 외부일 수는 없음. 내부에서는 집필진이 되어야 하는데 맞다고 생각함. 또 성찰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다 보신 분들이 할 수밖에 없음. 외부에서는 내부가 하면 대항의 보고서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생각됨. 지금 혁신단의 복안은 백서 초안은 내부 사람이 쓰지만, 그것이 최종본이 될 수는 없음. 또한 원장도 공동의 집필진으로 들어가 백서 발간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원장이 동의한다 해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외부 전문가들의 검수, 검토 작업을 거친 후에 공식화될 것이라는 정도로 방침은 만들어졌음

○ 백서성격을 말씀하셨는데 TF 보고서를 보면 진상규명 권고의 한 안으로 기록사건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 구성원의 성찰보다는 진실 또는 진상 규명에 방점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의 발표를 보고서와 비교했을 것임. 방점이 그것이라면 내부 구성원의 성찰은 한 부분이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에서 보고서를 주실 때 위원장님과 1분과위원장께 우리는 기록화작업을 통한 성찰백서 발간 정도로 가려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분들은 흔쾌히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라면’이라고 말씀하셨음. (TF는) 4개월 동안 기록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한 자와 면담한 내용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음. 이후에 진실규명 보고서 작업을 통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셨냐면 1분과가 작업을 하면서 몇 가지 자료의 존재는 확인했는데 입수해서 검토하지 못한 자료, TF는 존재를 모르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가 없었으므로 내부에서는 자료를 볼 수 있으니 발견된 자료를 찾아서 작업을 해주길 요청하였음. 따라서 이것이 기록화 작업의 기본 요건이 될 것이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봐야할 것이 있다면 볼 것임. 두 번째 그 당시 기록원에 있던 사람들도 당시 사건의 실체를 잘 모름. 성찰에 대한 요구에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반성을 할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던 것(도 그런 차원임). 내용을 공유해야 반성도 되는데 공유하고 내놓을 내용의 범위를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백서에 참여해야 하는 내부 인력들이 막연히 불안할 것임. 이런 것들을 깨고 책임을 나눠가질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나의 큰 과제이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음. 그러나 내부의 변명을 나열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장치들을 마련해가고 있음.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가보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음

- 수사, 감사에 비하면 성찰백서는 수위로 보면 가장 낮으며 어떤 면에서는 수사와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 그것을 반영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임
- ⇒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로인데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수사의뢰를 해야만 한다는 정도가 (위법사항이) 나오면 하겠다는 말임
- 수사는 가해와 피해의 문제임, 예를 들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안 밝혀진 상황이라고 봄. 조금 전 기록원 내부 사람도 ‘뭘 알아야지 반성을 하지’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감. 왜냐하면 조직이 명령으로 움직였던 활동에 대해 잘잘못을 매번 인식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임. 뭐가 잘된 건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적인 잘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조사, 수사, 감사, 진상규명 이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임. 성격에 맞게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기록원이 있기 때문에 기록원이 모든 것들에 중심을 잡고 수사의뢰할 건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할 것은 조사해야 함.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보면, 절차와 순서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성찰백서라는 말이 나오니, 더군다나 계획은 잘 모르겠고, 엄청난 작업임에도 하신다고 하니 어찌된 일인지 하는 막연함이 있는 것임

⇒ 사안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음. 안에서 합의가 안 된 것을 원장이 확답하기 어려움. 결국 원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록원의 신뢰와도 연결되는데 기록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기록원이 하겠다고 하면 하겠지' 라고 믿어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 수사의뢰 같은 것은 해야만 할 게 나오면 하겠음

○ 실익을 위한 협상이나 타협은 법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탈법 혹은 불법영역과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의 실익을 위해 범법자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수사의뢰는 TF 권고사항이지 않나?

⇒ 현상황에서 권고사항을 바로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 그리고 국가기록원은 소속기관으로서 한계도 있음

○ 그 때 꼭 기자회견을 해야만 했나?

⇒ 혁신 TF가 보고서를 주고 간 것이 2월26일이었음. 후속조치는 2주 안에 나와야 해서 그래서 3월 15일에 했음. 한 달 뒤 사과했다면 '왜' 라는 반응이 나왔을 것임. 내가 안타까운 것은 혁신 TF 활동종료는 12월 말에 했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혁신TF에서 결과보고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1월 15일에 브리핑을 했고, 2월 26일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음. 제한된 시간에 광범위한 조사를 해서 그렇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음. 제한된 시간 기타 등등을 봤을 때 범위를 줄여서 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함

-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옳고 다 그른 법은 없음. 자꾸 시기의 엄중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에 대해서는 농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국정농단 당한 것만큼 아픈 시절을 겪었는데 어떻게 만들어 낸 개혁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나 환기를 해보면 과거의 잘못된 점을 단 한 가지도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성찰백서라든지, 혁신 TF가 가능할 수 있을까, 정리할 걸 하지 못한 채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시간은 수개월 지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오고 있음

⇒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1월 15일에 브리핑이 있고, 최종 결과보고를 받고, 2주안에 답을 하고, 혁신추진단도 마무리하고 백서발간도 정했다면 기간은 한 달 정도 당길 수 있었음. 그러나 인사교류도 쉽지 않아 혁신추진단 구성이 완료된 것은 3월 23일이었음

- 6월말이라는 것은 방향이 정확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임.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과, 혁신 TF위원, 자문위 일부 위원들도 방향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음. 원장님 입장은 소속기관이고 장차관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지만 제 생각은 전문가로서 들어왔고, 기록공동체라는 열망에 의해 그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조직 보위적이라는 일반적인 우려가 있음. 이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임

⇒ 내가 원장으로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직으로부터 왕따 당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조언하였음. 지금 생각해보니 행정기관으로부터 왕따를

당해서도 안 되고, 기록공동체를 주저앉혀서도 안 되는 상황이며, 원장으로서 해야 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님. 기록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야 함.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움직이고 싶게 만들어야 함. 시간이 걸림. 나에게는 오늘 성공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후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함. 지금 이 순간 내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기록원 내부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밖에서 저를 가열 차게 공격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음. 기록원 내부에서는 아직도 '원장님이 말씀하는 기록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함. 1월 중순의 인사 조치도 외부에서는 순환보직을 하는 사람들이 뭐가 대수냐고 하겠지만, 원내는 1분과 보고서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어려움이 컸음. 청산을 안하면 무엇이 있겠냐고 하지만, 그것은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나로서는 자문위나 다른 자리, 또 언론, 페이스북, 혁신추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저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해도 저는 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깨면서 갈 수 없음

- 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블랙리스트 실체적 확인을 못했음. 이 때문에 보수신문이 TF가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근거자료로 보도를 하고 있음. 실체적 확인을 못했다는 말은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며 차별을 받았던 사람은 존재함. 그리고 경제적, 학술적 차별을 받았던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 위당이 피해를 받았던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타 부처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 추구 세력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를 하는데 행안부는 소극적임. 이에 대한 상당수가 국가기록원에 불만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해야 속도가 늦더라도 답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재발 방지 개혁이 완성된다고 생각함

⇒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 못했다는 말은,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준비했을 때의 모범답안이 ‘블랙리스트의 명단이 나온 것은 아니나 누군가 배제되었다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였음’이었음. 나 스스로가 그 대상자로 경험한 바가 있음. 그리고 혁신 TF 활동 중에는 그 명단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니 나중에 기록화 작업을 통해서 찾아보겠다는 답이었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분명한 의사전달이 부족한 듯함. 인터넷 기사를 보면 내가 학계에 있을 때에도 배제현상이나 명단의 존재에 대해 충분히 들은 바가 있어 존재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음. 특히 전진한 소장과 이상민 선생님한테는 죄송하고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현재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움. 또 하나는 사과문에 블랙리스트가 없음. 저도 대상자라고 밝혀진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가 적절히 않았음. 대부분의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는 기록공동체의 사람들이지만, 제가 포함되어 있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기록학계에 현안으로 말하기가 주저되는 측면도 있음

- 그게(블랙리스트) 범죄라고 다른 부처에서는 처벌을 하고 있음. 오늘 원장님과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원장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생각을 했음. 블랙리스트의 함의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려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사건임.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불법적 성격의 권력남용의 사안이라고 봄. 또 다른 맥락에서 국가기록원이 독립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찾아나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은 무인도에 고립된 독립이 아니라 불법하고 부정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을 말하는 것임.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정권의 부정과 연결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른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 기록학계의 블랙리스트는 정치적인 이유로 만든 리스트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음. 그래서 우리끼리의 싸움으로 비칠 수 있고 논쟁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함

○ 우리가 오늘 논쟁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ICA 같은 것이 정상적인 의사소통 없이 갑자기 해체되거나 개최 도시의 시장이 배제되거나...

⇒ 제가 그걸 옳다고 생각할 리는 없지 않나

○ 원장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때문에 다 자기만의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사안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각개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좁히자는 것이 목적임. 원장님도 이런 것을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아 주셨음 좋겠고,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음. 블랙리스트가 문제없다는 것은 좀 아님

⇒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님

○ 국가기록원 내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적폐 대상이 무엇인지 궁금함. 원장님이 블랙리스트는 적폐대상 중 큰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나

⇒ 학계에 있을 때도 그랬고 나의 일반적인 입장은 기록의 정치화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의 주체는 물론 국가기록원이지만 기록공동체도 포함된다고 생각함. 내가 학회장일 때, 학자로서 그런 마음이었음. 기록공동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2009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조직화된 목소리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이 있지 않나. 저는 가장 크게 사과할 일,

빠에 담고 가야할 일이 그 문제라고 생각함. 오히려 1월 15일의 혁신 TF 브리핑이 후 블랙리스트가 논쟁이 되면서 NLL 등이 가려진 것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함.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 제외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밝히고 찾아 논란을 깔끔히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이 생각처럼 될 거 같지 않음. 다만 기록화 작업에서 블랙리스트를 배제하고 가지는 않을 것임

- 법원행정처에서도 블랙리스트 이야기 나왔을 때 대법원장이 포괄적으로 사과하였지만 내부에서 움직임이 없으니 수사해야 한다고 했을 때 대법원장이 무마시켜 혁신 의지가 있나하는 시각이 있었음. 성찰백서를 통해 드러나면 하겠다고 하셨지만 집필을 내부 구성원이 하였을 때 지금 밝혀진 것 이상의 무엇을 더 발견할 수 있을까, 수단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수사의뢰를 통해서만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작동했음. 내부적으로 자성하고 성찰해서 과거 이런 서류가 있었다고 내놓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강력한 조치 없이 성찰백서라는 이름으로 나오면서 블랙리스트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함. 좀 전에 2009년에 기록공동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음. 그동안 국가기록원이 기록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음. 그렇다면 NLL, 이지원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블랙리스트도 크게 이야기될 수 없다고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 기록이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도구화가 되어서는 안됨.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기록원 독립성 이슈를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사건이기도 함. 이는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이기도 한 이

소연의 생각이고 지금 당장 블랙리스트의 사건을 수사의뢰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판단(근거)임

○ 오늘 이런 이야기를 공식회의에서 처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원장님과 위원 각자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야기는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함. 어렵고 불편하지만 꺼낸 이유는 지향이 같아서임. 원장님이 기록원에 계신 많은 일하는 분들에 대한 애정과 함께 가셔야 하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임. 방법이나 절차는 다를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저의 생각만 말하자면 엄청나게 큰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일이 왜 생겼으며, 어떤 구조에서 생겼으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일의 성격이 규명될 것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일이었다면 법으로 넘기면 되고 반성이나 성찰로 해결될 것이면 그렇게 하면 됨. 이런 작업이 진행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록원 일꾼은 깔끔하고 신선한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봄.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 신임 원장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고 우리는 또 이를 돕는 조력자로서 일정기간 함께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문회의에 임하고 있음. 그런 점이라면 목표점이 다른 것은 아니므로 생각과 방법이 다르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음

○ 블랙리스트 관해서 다른 두 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음.

⇒ 회의에서 공식발언을 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협회에서 나쁜 의견을 조율 중이라서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음.

⇒ 저는 피해당사자인 분께서 공공기관의 장의 입장으로서는 대화를 하시는데 마치 청문회를 보는 듯해, 사실 자문역할을 하려고 온 건데 조금 당황스러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음

- 최근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TF에서 공무원 인사조치까지 포함한 권고안이 나왔을 때 국회에서 바로 부총리에게 권고안대로 할 거냐는 질의가 있었음. 그때 하지 않을 거라고 답하지 않고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번 단계에서 사실 그게 필요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음
- ⇒ 공무원이 흔히 하는 검토하겠다는 답을 이 자리나 기록공동체와 만나서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 앞으로 3년 동안의 특히 초기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생기기 전에 국가기록원이 다시 정치적인 의미로 논란거리가 되는 걸 피하고 싶음. 민간전문직 원장이 와서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기관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기록이슈를 가지고 정립해가는 기관이라는 기본조건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음
- 자문회의지만 항간에 들려오는 말을 원장님께 전하기로 했음. 사적인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은 기록학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정확한 워딩을 통해 자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되길 원함
- 정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개인적 판단으로 이게 정치적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봄. 잠깐의 논평이나 언론 기사 하나에도 대응을 하는 형태인데 이 카드를 계속 쥐게 할 수는 없음. 정리를 해야 함
- ⇒ 정리를 하는 순간 재점화 됨. 지금 잣아드는 순간임.
- 전선은 다시 생길 것임. 이에 대비해야 함
- ⇒ 협회든 어디든 각자 판단에 따라 해야 할 일은 해야 함.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대로 가야할 길을 가겠음. 끝.